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논란

“이사 충실의무 확대” vs “경영 일선 혼란초래”

〈더불어민주당〉

〈재계〉

정재계, 기업가치 제고 방안 강구
더민주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경제단체 “경영권 공격수단 악용”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가운데, 재계는 선부른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의 경영권을 훼손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7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해 자본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

익이 침해되더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알짜 사업 분야를 몰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해 기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들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찬성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반대하는 “주주 간 이해충돌의 문제를 불완전한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째 원인”이라며 “지난 30여년 동안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지분율이나 지분 가치가 축소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왔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당한 자본거래가 계속되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회사법 체계 훼손 ▲국제적 기준에 위배 ▲현행법으로 입법 목적 달성 가능 ▲경영일선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기업이 정신 위축 등을 이사 충실 의무 확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될 경우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들이 내리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모두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 실현 효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반주주 보호와 대주주 견제, 이사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현행법 유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경영진 사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했다.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55.2%였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업은 8.6%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안상미 기자

평당 6736만원… 반값 수준

특히 강남의 낮은 전세가율을 감안해 바로 임대를 놓아도 10억원은 들고 청약에 나서야 하지만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청약함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 청약이 전일 전 평형 1순위에서 마감됐다. 178세대 모집에 9만3864명이 접수했다. 앞서 특별공급에 청약한 4만183명을 감안하면 총 청약자는 13만4341명이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59㎡ B타입이 16세대 모집에 2만5678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1604대 1로 가장 높았고, 59㎡ A와 59C 타입도 1000대 1을 웃돌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신반포15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대거 쏠렸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6736만원이다. 최근 집값이 들쭉이면서 로또를 넘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4610만원, 84㎡가 23억3310만원이다. 작년에 입주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59㎡가 지난 달 30억6000만원에, 아크로리버파크가 3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는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달 50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1월 ‘IPO 단계별’서 계속

자율 책정… “큰 금액 어려워”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간에 상장이 취소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증권사들에도 좋겠지만, 상장을 주관하고 싶어 하는 증권사들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 해지가 아니라 상장심사 재청구 쪽으로 발행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해지가 되어서 수수료를 책정한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책정 과정이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으로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관사와 발행사가 협력해 상장심사를 재청구하거나, 수수료를 실제로 받더라도 발행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선에서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업계가 IPO 과정에서 발행사와 이해관계 때문에 수고를 하고도 상장이 취소되면 수수료를 못 받아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상장이 무산돼도 수수료 같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주관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좀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예비상장기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국내 생산 2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 건설·의약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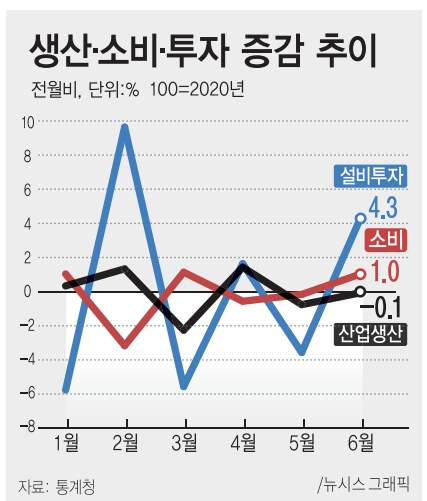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

반도체 생산 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국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반면 투자와 소비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반도체 생산이 7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음에도 건설 부문 등의 부진이 전체 생산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내수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반등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준)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5월에 비해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등 4개월째 증가했



지만 3월 2.3% 감소로 돌아섰다. 4월(1.4%) 들어 다시 증가했지만 5월(-0.8%)과 6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건설업에

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석유정제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는 전월대비 8.1% 늘어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지수(163.4)로는 198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전년 대비로는 26.9% 늘었다. 화학제품(1.2%), 기계장비(1.0%) 등의 생산도 늘었다. 그러나 의약품(-11.7%), 석유정제(-4.1%), 식료품(-2.9%) 등에서 감소세가 컸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소비는 지난해 12월(0.5%), 1월

(1.0%)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했다. 이후 4월(-0.6%)과 5월(-0.2%)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9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4.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달 4.3%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 지명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고,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 내정 소식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3선 국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 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

익향상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지사를 두차례 역임해 GTX 신설 발표 등 공약이행 평가에서 1위를 했고, 최근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